

‘상습 마약’ 유아인 혐의 일부만 인정

첫 재판서 일부 혐의는 부인...“재판서 다룰 것” 출석 앞서 “심려끼쳐 송구하다” 심경 밝히기도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가 12일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등 혐의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이 다소 과장됐다고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지원)는 이날 오전 유씨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정 정장 코트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유씨는 침착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이후 유씨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동범행인 대마흡연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 엄홍식의 대마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피고인 최하늘의 마약류 방조와 보복협박 혐의는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른 과장된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춰 검토할 부

분이 다수 있다”며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기일이다. 피고인 출석은 의무이기에 유씨는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유씨의 첫 재판은 당초 지난달 14일로 예정됐다가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열리게 됐는데, 유씨 측은 한 차례 더 기일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유씨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통상 기록보다 (기록 양이) 두 배는 되고 개인정보도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은 갖고 있지만 사실관계 등은 차회 의견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마 수수에 대해 어떤 취지로 누가 누구에게 (교사) 했다는 것인지 공소사실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며 공소사실을 특정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검찰 측에 공소사실을 구체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 측에도 의견을 정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법정 출석에 앞서 유씨는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남은 재판 과정을

성실히 임하며 할 수 있는 설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저로 인해 크게 실망하시고 피해를 보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재판 종료 직후 유씨는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구체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호화 변호인단 선임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죄송하다”며 답변을 아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32)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범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유씨와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슬비기자



여수소방, MZ세대와 소통과 화합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여수소방서는 지난 8일 MZ세대와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여수 이터까지 가봤니?’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구례소방, 전기화재 예방 ‘트래킹 클리너’ 연중 운영

구례소방서는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배전반, 분전반, 콘센트 내 먼지(분진)를 제거하기 위해 공기호흡기 용기를 활용한 전기화재 예방 ‘트래킹 클리너’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곡성소방,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소방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곡성소방서는 지난 7일 오전 8시에 곡성군 유관기관과 함께 곡성중학교 정문 시작으로 소방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곡성=양해영기자



담양소방,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성회장 이취임식

담양소방서는 지난 11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성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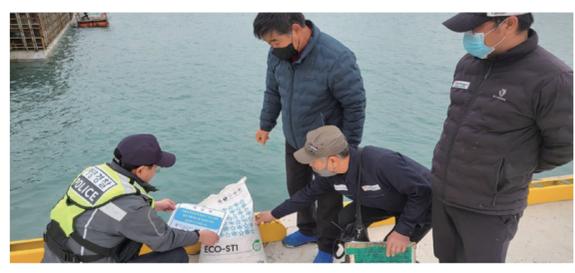
담양=박종영기자



무안경찰, ‘우리동네 마실팀 운영’ 정성치안 활동 전개

무안경찰서 현경파출소는 현경면 45개 마을에우리마을 담당경찰관을 지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애로사항에 귀기울이는 등 정성치안을 펼치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완도해경, 선박시설 빙판 안전사고 예방 위해 밭 벗고 나서

완도해양경찰은 겨울철 기습적인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노화파출소와 노화읍사무소가 협업하여 빙판으로 인한 해상추락 등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빙판ZERO! 안전사고ZERO! 프로젝트)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올해 조류 경보, 작년보다 36% 감소...“녹조 종합대책 효과”

올해 조류 경보 476일...작년 743일 대비 줄어 낙동강 유역 ‘경계’ 일수 14일, 전년도 7% 수준 내년 ‘4대강’ 야적퇴비 수거, 녹조제거선 확충

올해 조류 경보 일수가 전년 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녹조 종합 대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대책을 보다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조류 경보는 지난 6월 8일 낙동강 칠서지점에서 첫 발령된 이후 11월 말까지 전국에서 총 476일 발령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43일에 비해 36% 감소한 수치다.

매년 대량의 녹조가 발생해 논란이 됐던 낙동강 유역의 조류 경보 일수는 올해 267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5일에 비해 40% 줄었다.

조류 경보 일수는 관심, 경계, 대발생 등 3단계로 나뉘는데, 낙동강 유역의 경계 일수는 지난해 206일의 7% 수준인 14일에 불과했다.

올해 전국 강우량은 지난해보다 1.4배 증가해 녹조 대응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으나 평균 기

온이 전년 대비 0.3℃ 상승해 불리한 측면도 있었다.

김중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류 경보 일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오염원 유입을 저감하는 사전 예방과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녹조 제거선 도입 등의 사후 대응을 포함한 녹조 종합 대책 추진이 효과가 있었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낙동강의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야적된 퇴비 640개를 일일이 조사해 10월 말까지 81%인 518개 퇴비를 수거하고, 수거하지 못한 퇴비에 대해서는 덮개를 전부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퇴비의 소유주를 확인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개별 축산농가에 퇴비 덮개 1600개를 보급해 사유지 내 퇴비 관리도 강화했다.

또 올해 5-6월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과 칠서지

점의 녹조 대응을 위해 남강댐, 창녕함안보, 낙동강하굿둑을 2차례 연계 운영해 하천 유량을 조절했고, 그 결과 물금매리, 칠서 등 낙동강 취수원에서 녹조가 감소했다.

아울러 녹조 발생 기간 동안 대형 및 소형 녹조 제거선, 수면포기기 등 녹조제거장비 등을 통해 취수원에서의 녹조 유입을 줄이고, 정수장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가동해 먹는 물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내년 녹조 발생에 대비해 올해 낙동강에서만 진행한 야적퇴비 수거 작업을 금강, 한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에 확대하고, 대형 녹조 제거선 16대, 소형 녹조제거선 3대 등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각 유역 환경청마다 녹조가 다양 발생되는 예상 지역을 중심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지역별 대책을 추진한다.

김 물환경정책관은 “올해는 야적퇴비 수거 등 다양한 대책들의 효과와 기상 영향 등으로 녹조 발생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내년에도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 녹조 발생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부산세관, 사랑의 연탄 배달

12일 부산 동구의 한 마을에서 부산세관 직원 20여 명이 소외계층 가구에 전달할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뉴스스

광주교사노조 “교사에 행정 업무 넘기는 학교 고발” 경고

광주교사노동조합이 교사에게 행정업무를 떠넘기는 학교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교사노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의 역할은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이다”며 “단협 사안을 준수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현재 교사 사회의 미해결 과제는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해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과 행정업무를 교원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며 “이 중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과도한 행정업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 노조의 특수성 때문에 학교 현장은 교사 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단체협약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교사의 업무는 수업과 생활교육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근무조건 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업무를 교원에서 분리해 내는 것은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기 위한 노력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체협약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을 고발하겠다”는 공문을 광주지역 유·초·중·고에 발송했다”며 “2024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관행적으로 교사에게 주어지는 행정 업무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